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통일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
 - 가. 시대적 과제
 - 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
 - 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2. 통일 환경의 도전
 - 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 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 다. 남북관계의 위기
3. 한반도 통일의 조건
 - 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
 - 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
 - 다. 도로: 통일외교
 - 라. 연료: 통일열망, 특히 북한주민의 한국선호 열망
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
 - 가. '3대 공동체' 통일 엔진
 - 나. 방향 설정과 속도조절의 리더십
 - 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
 - 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
 - 나. 대북 지식협력 확대
 - 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
 - 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 마. 문화적 통일 추진 적극화

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

가. 시대적 과제

- 21세기 한반도는 국가건설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다음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백년을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 있음.
- 한국사회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 즉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 실업문제의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의 대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준비,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망적 사고와 큰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게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백 년을 의미 있게 만들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
- 남북분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단비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는 유형무형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임.

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

-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지리적 분단, 1948년 체제적 분단, 1950년 심리적 분단 등 3중적 분단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3중적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임.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됨으로써 분단체제에 익숙해졌고 분단구조에 함몰된 나머지 분단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임.
- 첫째, 분단이 초래한 지리적 폐쇄성으로 겪고 있는 비용임.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밀폐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의식과 가치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지리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륙으로의 진출로인 동서해안 전용고속도로를 건설

하고 중국·러시아와 통행협상을 단행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야 함.

- 둘째, 분단이 빚어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분단대결 상황에서 군사비와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하며, 남한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상황임. 이러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두고 남한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는 없음. 비효율적 분단체제를 과감히 구조조정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인적 계발(啓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셋째, 분단으로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분단이 초래한 최대의 폐해임.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북 간 사회내부에 분단구조를 내재화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적 대립과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하였음. 신뢰(trust)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21세기에 분단극복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필수 과제임.

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 통일은 남북한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으로, 정치·경제·군사·외교·사회문화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과정임. 근래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방식이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고, 실제로는 무력통일(베트남), 흡수통일(독일), 합의통일 후 무력통일(예멘)로 이루어졌으며, 중국-홍콩은 일국양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통일 또는 국가통일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바,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과 함께 병행될 것이며,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복합적 네트워크로 진행될 것임. 남북관계는 대칭적 분단체제에서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정치적으로는 연합단계 또는 연방단계를 거쳐 국가통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남북통일을 통합과정으로 보고, 통합과정을 간단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남북통합수준은 2007년 27.1%, 2008년 21.0%, 2009년 19.9%로 평가됨.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지리적 분단,
1948년 체제적 분단,
1950년 심리적 분단 등
3중적 분단으로 진행...
3중적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임**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통일
또는 국가통일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과 함께 병행될
것이며, 정치·군사·
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서 복합적
네트워크로 진행될 것

-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빈부격차, 이념대립, 적대의식, 이질적 제도와 가치관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업문제, 대규모 인구이동, 사회보장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통일과정에서 직면할 이러한 도전들을 복합적 기획력으로 준비함으로써 평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이런 점에서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이자 미래전략임.

2. 통일 환경의 도전

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 북한의 경제침체와 식량난은 북한체제의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 이하로 세계의 최빈국에 속하며 시장화(2002년 7월)와 화폐개혁(2009년 11월) 이후 생산양식의 변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주도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경영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제조업의 20%, 무역의 40%, 서비스의 50%에 달하고 있음.
- 경제활동을 위한 주민이동의 증대와 그로 인한 문화접촉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한의 CD,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를 접해 본 사람이 50%를 넘는 수준임.
-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김정일의 건강 여부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잠재하고 있음.
-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심화, 주민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2008년 3월과 2010년 3월에 청진과 원산에서 각각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빈곤과 부패의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 2008년 북핵 불능화 진전과 북한 적성국교역법 해제(2008년 6월) 및 테러지원국 해제(2008년 10월) 등으로 6자회담에 진전이 있었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2009년 5월)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가 발효되어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
-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음.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동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 패권전략의 최전선임.
-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국제위기그룹(ICG)은 중국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전략파’와 전통우호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 간의 토론을 거쳐 “경제·군사적 안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한반도 정책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¹⁾
-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2009년 7월 이후 북중 간 경제교류와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최태복 당비서(9월 30일), 김계관 제1부상(10월 12~16일),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10월 16일),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10월 14일), 최영림 총리(11월 1~8일) 등의 인사들이 중국을 잇달아 방문함.
-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개입정책을 적극화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주도의 통일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남북한 통일문제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 있어...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동과
중국에 집중되어,
한반도 문제는 미중간
패권전략의 최전선임**

다. 남북관계의 위기

- 남북관계는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2008년 7월), 개성 근로자 억류사건(2009년 3월), 2차 핵실험(2009년 5월),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연평도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
-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 강화와 비대칭성 증대로 인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합과정에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지난 20년의 경험은 교류협력의 증대 그 자체가 통일을 보장해 주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개입
정책을 적극화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주도의
통일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이라는 단선적 정책에서 북한변화와 통합역량 강화라는 복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한반도 통일의 조건

- 통일실현에 필요한 조건을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즉 통일 프로세스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통일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엔진, 기사, 도로, 연료의 4가지로 볼 수 있음.

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

- 통일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능 좋은 강력한 엔진이 필요함. 통일엔진은 남북한의 협력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남북한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남북협력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면 결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임.
- 통일엔진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3대공동체’ 같은 것을 의미함.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동체, 개성공단 등의 경제 협력이나 경제공동체, 정치적 대화기구, 인도주의·인권 대화 등이 통일엔진에 해당됨. 현재 남북 간에는 정치적 대화기구가 없으며 회담체로서 대화가 제도화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남북대화 상설기구 설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음.

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

- 통일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기사의 역할이 정치적 리더십임. 리더십의 역할은 집단과 개인들의 사정, 국가의 경제형편을 감안하여 통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역할임. 통일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정서적 설득을 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함.
- 통일리더십은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 한두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통일의 목표와 정책을 이해하고 지도자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통일지지세력이 있어야 발휘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통일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도로: 통일외교

-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사정이 중요하며, 이는 통일에 필요한 국제환경을 의미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변 4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을 성취하려면 주변국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해야 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외교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일반대에 부딪혔으나, 한국은 적어도 주변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아님. 한국은 전범국가가 아니며 강대국이 남북한을 분할한 명분이 약하여 통일에 대한 도덕적 명분이 있음. 이러한 도덕적 명분을 십분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한다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 확보는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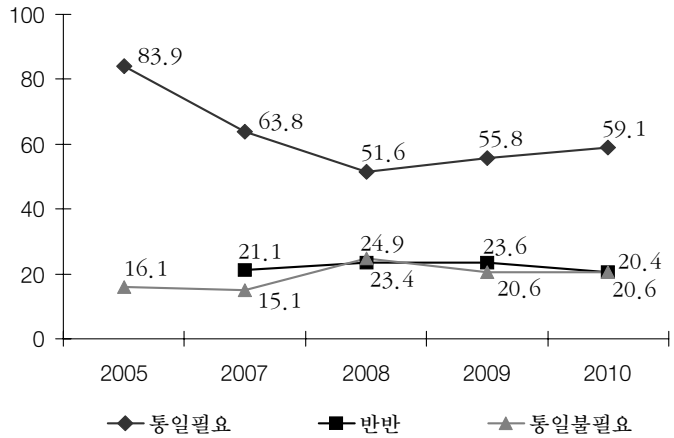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일반대에 부딪혔으나, 한국은 적어도 주변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고 강대국이 남북한을 분할한 명분이 약해 통일에 대한 도덕적 명분 있어

라. 연료: 통일열망, 특히 북한주민의 한국선호열망

- 위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며, 따라서 통일자동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어야 함. 연료란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의미함. 이는 통일엔진을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한국인의 통일 의식과 통일열의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의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 한국인의 통일의식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53.3%(2007년)→45.6%(2008년)→55.8%(2009년)→59.1%(2010년)로 60%가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 통일을 원하며 “대가 지불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약 9%에 불과함.
- 그러나 통일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통일열망이란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현재 ‘남조선’은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일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통일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공급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통일열망이란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
열망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북한은 현재
'남조선'은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

가. '3대 공동체' 통일엔진

- 통일엔진으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를 상정해 볼 수 있음. 리더십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는 역할을 함.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함. 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평화공동체 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참고한다면 남북한의 경우에도 안보문제와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을 통합패키지로 만들어 영역 간의 문제를 상호보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임. 헬싱키협정에서는 제1부 안보문제, 제2부 경제·과학·기술협력문제, 제3부 인적접촉·정보·문화·교육 문제를 상호간의 패키지딜로 해결하였음.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핵문제와 경제협력, 사회문화 문제를 복합적 패키지 딜로 해결하는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을 포함한 평화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함. 그러나 핵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이 안보문제에 관해 쉽게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평화체제가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과 협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방향 설정과 속도조절의 리더십

- 리더십의 중요성은 통일자동차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임. 이는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 통일의 방향은 북한의 대남친화력을 향상하는 것이며 북한주민의 민심을 친한국 정서로 변화시키는 것임.
- 통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원칙과 포용 사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함. 원칙견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포용을 위해 속도를 높이기도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포용을 강조하며 속도를 높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원칙견지를 명분으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밟고 있는 상황임.

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은 2009년 7월, 북한과 기존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기조에서 북중 경제 및 군사협력을 적극화하고 있음. 특히 “창지투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북중 교역의 비중이 2007년 42.7%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9.5%, 52.6%로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북 경제영향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유럽연합(EU)의 경험을 참고하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안보·평화 체제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음.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협력체제를 유인하며, 남북연합과 정치통합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헬싱키 프로세스
(Helsinki Process)를
참고한다면 남북한의
경우에도 안보문제와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을 통합패키지로
만들어 영역 간의
문제를 상호보완적으로
풀어 나가야**

**북핵문제와 군사적
문제들을 국제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중국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어**

- 북핵문제와 군사적 문제들을 국제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남포, 신의주, 청진, 원산 등의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협상하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진출을 확대해야 함.

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

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북한주민들의 대남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통일전략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비누, 치약, 수건, 샴푸 등 생필품을 대량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증산층에 대한 민심잡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 호감도를 높여야 함.
-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지역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남선호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소프트파워를 높일 필요가 있음. 북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향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성격의 지원을 적극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파워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나. 대북 지식협력 확대

- 북한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내부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지식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특구 개방 전략, 정보산업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강하나, IT산업과 같은 첨단과학 분야와 달리 경제·금융 분야는 북한 내에서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이 없음. 지도부가 개혁·개방 의지를 갖고 특구를 만들고 경제제도를 개혁하려고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시장개혁에 필요한 무역, 금융 등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노하우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

- 북한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관리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인공재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지역에서의 재난은 남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남북협력이 필요함.
-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와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한 간에도 이러한 재난과 위험, 생태·기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인도적 협력증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남북한의 자연재해와 인공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남북 공동 재해대책 기구를 구성함.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남북TF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큼. 남북공동 재해·재난 대책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정치사회적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유용한 협력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 북한주민들의 대남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의 정착임.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는 것은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임. 탈북자들을 통해 남한사회의 좋은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면 북한사람들의 대남의식과 태도가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탈북자들이 느끼는 한국생활 만족도는 60% 정도로 높은 편이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45.5%에 불과하나, 탈북자의 정착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원봉사자나 정부의 보호담당관은 각각 52.9%와 66.0%의 탈북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북한주민의 일부분인 탈북자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북한내부의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

**북한주민들의 대남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의 정착...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는 것은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

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문화적 통일 추진 적극화

-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한민족, 즉 조선족과 고려인, 재일동포와 재미동포는 이제 남한의 문화와 가치를 대부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추세인바, 문화적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때임.
-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문화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변 조선족, 연해주 고려인, 재일교포들과 함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과 문화교류를 증대하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남한선호열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통일엔진을 만들고 리더십과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통일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평화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함.

기획 및 감수: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김병로

現,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1991년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남북한 발전전략 비교”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신대 교수, 국방부 합참 민사심리전 자문위원, 중국 연변과기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민화협 정책위원, KBS통일방송 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석

- 1) International Crisis Group, *The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n North Korea* (2009.1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